

## 제 13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 >

### 주제: 노인의 일과 복지, 그리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 **포럼개최의 목적,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좌장: 이 재 모(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 **주제발표**  
박 경 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지정토론 1**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 ▶ **지정토론 2**  
김 영 준(경기시흥시니어클럽 관장)
- ▶ **지정토론 3**  
임 중 철(경기부천시니어클럽 관장)
- ▶ **지정토론 4**  
최 기 호(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 ▶ **질의응답 및 폐회**  
좌장: 이 재 모(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노인의 일과 복지, 그리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조준행\* · 박경하\* · 이현미\*

## I. 서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정부는 기존 기본계획('06)의 보완과정을 거쳐 '09년에 '새로마지플랜 2010'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방향은 크게 4개 분야(저출산 분야, 고령화 분야, 성장동력 분야, 국민인식개선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화 분야의 경우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라는 명제 아래 또 다른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노인일자리 창출 ② 노인의 생산적인 사회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 및 여가문화 활성화 ③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교육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일로 귀착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앞서 소개한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르면 고령화 분야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분야에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을 정도로 '노인의 일'이라는 아젠다(agenda)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잠재적 노동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대체재 확보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고령화분야의 사회참여 지원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노인'과 '일'이 주요한 연결고리로 작동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사회참여의 유형 중에서 일, 특히 유급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및 부가적 파급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유급노동은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써 일정수준의 급여가 동반된다. 동반된 급여는 경제적 자율성의 확대를 지원하게 되고, 삶의 질이 경제적 자율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 자원봉사 등과 같은 여타의 사회참여 촉진도 유발할 개연성이 높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

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삼아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대상은 크게 3집단이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아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에 포함된 노인은 현재 취업자일수도 있고 미취업자일수도 있다. 첫 번째 집단에서 살펴볼 주요내용은 참여경험 노인집단의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경제적 복지상태 수준 및 복지요인이 노동공급(취업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심집단은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향후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아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집단이 나뉘게 된다. 즉,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향후 일할 의사도 가지고 있고 노인일자리아업을 알고 있지 못한 집단은 두 번째 관심집단이 되며,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향후 일할 의사도 가지고 있고 노인일자리아업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집단은 세 번째 관심집단이 된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 노인일자리아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들은 어떻게 다르며, 인지여부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집단에서는 향후 경제활동 선호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들이 얼마나 상이한지,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경제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한 번도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관련되는 정책적 고민지점들을 확대시켜 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무형태(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수준, 종사직업 분야 및 구직 시 우선조건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욕구수준들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한편, 관심집단들에 대한 세부정보는 '0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잠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자료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노인패널조사의 1회차 조사자료로서,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의 복지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의 상관성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배출요인(Pushing factors)과 유인요인(Pulling factors)에 의해 달라진다(Pampel & Weiss, 1983). 배출요인이란 산업구조나 고용구

조 등의 변화로 인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비자발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인요인이란 사회보장 등과 같은 공적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해 경제활동 유인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의 고용률(2007)은 31.1% 수준으로 OECD 평균 고용률 11.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은퇴 시기나 근로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자영업이나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이철희, 2002). 이는 주로 배출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둘째, 유인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계가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지연, 200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복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구인회·손병돈, 2005; 최현수·류연규, 2003), 국민연금 개혁은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김수완, 2007). 한편, 현 노령세대가 안고 있는 기초보장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역할로 미뤄지고, 포괄범위가 매우 협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등의 공공부조가 일부 노인 빈곤층의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개혁 논의의 부산물로 도입되었지만 기초연금의 특징을 띠고 있다 기보다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의 부수적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현 세대 노인은 퇴직과정에서 반복적인 재취업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지은정, 2006),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근로소득에 복지의존도가 매우 크다(김수완·조유미, 2006).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이 소득원별 빈곤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확인한 김수완·조유미(2006) 연구에 따르면, 사적이전의 포함 전후는 빈곤지표가 크게 달라진 결과와 다르게, 공적연금은 수급율 자체가 높지 않아서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노인이 고령기에 일하고 있거나, 가구주가 일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빈곤 감소 효과는 매우 높다.

노인의 취업과 관련된 분석을 시도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생애 마감기에 취업상태에서 퇴직상태나 실업상태로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그러한 경로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장지연, 2003; 최문정, 2005; 박경숙, 2003). 이에 비해서 퇴직 전후의 연령기에 취업상태로 전환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고령자가 경제활동 단절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후소득이 예상보다 적어서 생활의 질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은퇴에 대한 계획보다 비자발적 요인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일찍 단절하는 경우에도 경제활동

재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Maestas, 2005).

한편, 노동을 일과 여가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노동경제학의 가정과 같이 노후에 임금수준은 낮아지지만 공·사적이전에 따른 소득증가 때문에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하는가? 또는, 소득증가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를 밝히려면 반드시 실증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근로소득이 변화되면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는 동시에 나타나서 어느 효과가 더 지배적인지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Ehrenbeg and Smith, 2000; 김태성, 2005). 원석조(2008)는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노동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복지가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전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sup>2)</sup> 복지와 근로동기의 영향관계는 개별 사회복지제도들이 개인의 근로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들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변금선, 2005; 유길상, 2004; 강성호 외, 2008, 이만우, 2008). 이러한 논의들 중 고령자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조기퇴직 문제와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관한 관심들이었다(강성호 외, 2008, 이만우, 2008). 그리고 현대 사회의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직경로에 복지제도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박경숙, 2003; 최문정, 2005). 강성호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자료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법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노동공급 함수 추정을 통해서 급여수준의 변화가 개인의 노동공급 확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 본 결과, 급여 감소가 노동공급 결정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만우(2008)는 한국노동패널 6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공급 유인이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다룬 국내연구(권문일, 1996; 장지연, 2003; 권승·황규선, 2004; 김영범, 2008)를 보면 퇴직 후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직업, 나이, 학력, 자산,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전직업의 경우 사무직인 경우가 생산직에 비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건강상태는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권문일, 199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2) 원석조(2008)는 사회복지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제공되는 일이 가치와 존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에 불과한 것이 되면 그러한 낮은 노동의 질로 인해서 근로유인이 약화된다고 강조함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권승·황규선, 200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연구(장지연, 2003) 등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보편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성용(2007)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재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노동공급 감소를 의미하는데, 지역실업률 변수를 고려한 성지미·안주엽(2006)의 분석결과, 지역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중고령자의 취업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 결정

한편, 노인의 경제활동을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노인복지적 측면까지 함께 조망한 연구도 많다. 우선,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정책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service awareness)를 독립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인지는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Calsyn & Winter, 1999).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표적집단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이란 불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면 정책체감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서비스의 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은 Anderson & Newman(1973)의 behavioral model 인데, 이는 본래 서비스 이용 의사와 관련된 모델이나 서비스 인지 결정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서비스 인지, 또는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세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비스 인지 및 이용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s)으로, 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개인적 성향을 말하는데, 주로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의 요인을 말한다. 선행연구 결과 주요 소인 요인은 연령, 성, 교육수준 등이었는데 연령은 서비스 인지와 부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대체로 많았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일부 존재했다. 성은 대체로 영향력이 없는 변수였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비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연령, 성과는 달리 교육수준은 대체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서비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관심도나 언론매체나 공공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한 수단과 관계된 요인이다. 원 모델에서 제시되었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구매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변수들 및 가구·사회적 특성,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 결과 가능성 요인으로 지역, 소득수준, 사회적 접촉 및 사회적 활동 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인지도가 높았고, 소득수준의 경우 정적 관계로 나타난 연구와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접촉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인지도와 정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영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였으며, 한편 친구, 가족과의 사회적 활동의 수가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 세 번째의 욕구 요인(need factors)으로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욕구로, 건강, 생활만족도 및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서비스에 대해 자신이 인식한 욕구 수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욕구 요인과 인지도와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강유진·강효진, 2005; 김신영, 2006; Calsyn & Winter, 1999; 2000).

### Ⅲ.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복지상태와 취업의 상관성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복지상태가 취업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복지욕구와 일에 대한 여러 동기를 지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와 노동공급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논의의 의의를 두고 있다. 노인들은 생계비 마련, 즉 절박한 경제적 동기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 실태조사>(이문국 외, 2007)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75%는 경제적 동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였고, 53.6%가 용돈마련 차원의 일자리 욕구가 아닌 생계비 마련의 동기를 가지고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이들 상당수(41%)는 원하는 일의 형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일제 근로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구성은 소득계층별로 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소득수준, 인적자원, 노동생애 경력 등에서 참여자들 간에 나타나는 다양성은 공·사적 이전 소득으로 유지되는 이들의 복지수준을 보편적 특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책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이

하에 속하는 절대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노인이거나 차상위 빈곤노인이며,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참여자들 중에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존재한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교육형 참여노인은 안정된 소득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대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공적 지원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사적이전이나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장지연 외, 2007; 정경희 외, 2005; 김수완, 2006)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생애 마감기에 취업과 재취업 반복하는 은퇴경로가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박경숙(2003)은 가구소득이 높거나 정반대로 낮을 경우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사적 부양능력이 취약하거나, 고용불안이 큰 고령자 집단은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은퇴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적부조에 따른 보호에서 제외되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진입한 저소득 참여노인들은 취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일 가능성이 크다.

본 장에서 살펴보려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복지적 상태는 어떠한지 경제적 복지수준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노인의 복지요인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결과도출을 위해서, 복지요인이 노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분석한다.

##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복지상태

### 1) 일반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월 소득 수준, 거주지역, 경제활동 변수를 통해 확인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분석 대상이 된 노인 423명 중 성별 구성은 여성이 55%로 남성 보다 다소 비율이 높다.<sup>3)</sup> 연령별로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연령에 속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75세 이상 연령층의 고령층도 19%나 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 및 초등졸에 속하는 노인이 대다

3)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 실태조사>(이문국 외, 2007)에서는 여성 참여노인 비중이 55.0%로 나타나 남성 참여노인보다 비중이 높았다.

수를 구성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9%,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3.9% 비중을 보인다.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는 46.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빈곤 가능성이 높은 노인독거 가구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50만원 미만에 있는 노인가구가 36.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고, 50-100만원인 경우가 30.7% 정도로 나타나 대다수 노인가구는 월 100만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노인의 67.5%는 동부,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절반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

〈표 1〉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노인집단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192	45.4
	여성	231	54.6
연령	60-64세	67	15.9
	65-69세	151	35.7
	70-74세	117	27.8
	75-79세	62	14.7
	80-84세	20	4.7
	85세 이상	5	1.2
거주지역	읍면부	137	32.5
	동부	285	67.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8	9.0
	무학(글자해독)	65	15.5
	초등졸	194	46.0
	중/고등학교 졸	99	23.5
	전문대졸 이상	26	6.1
가구 형태	노인독거	98	23.1
	노인부부	198	46.9
	자녀동거	108	25.7
	기타	18	4.3
결혼상태	미혼	1	.2
	기혼(유배우)	278	65.9
	기혼(무배우)	143	33.9
월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54	36.6
	50-99만원	130	30.7
	100-199만원	83	19.6
	200-299만원	24	5.6
	300만원 이상	32	7.5
경제활동	일하고 있음	198	53.0
	일하지 않음	225	47.0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대다수 노인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인적자본 수준도 저조하다. 한편, 지역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2) 경제적 복지상태

노인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어떠한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득원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빈곤지위와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았다. 노인가구의 소득원을 크게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에 사적이전 소득을 추가하여 시장소득을 구하고, 다시 사적이전 소득에 공적이전 소득을 추가한 가처분소득을 구하여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대로, 취업노인은 비취업노인에 비해 일차소득이 연평균 119만원 정도 높으며, 시장소득은 연평균 104만원, 가처분소득은 51만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사적이전, 공적이전에 따라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지위 집단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 120%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 비빈곤층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득원을 살펴 본 결과,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차소득만 고려하였을 때 비빈곤 집단이 빈곤집단보다 1,933만원 정도 평균소득이 높는데, 사적이전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1,992만원, 공적이전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2,676만원으로 점차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든 소득원에서 빈곤층은 차상위 빈곤층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인들의 고용지위에 따른 소득편차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일차소득의 간격이 공·사적이전 소득의 효과로 인해서 더욱 줄어드는 반면에, 빈곤지위에 따른 소득격차는 집단 간에 매우 크고,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효과가 집단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

&lt;표 2&gt; 취업 및 빈곤지위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구 분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취업여부	취업	1006.06	1061.326	1223.067
	비취업	887.0328	956.4285	1171.277
빈곤지위	빈곤(PL 100)	358.4378	438.4961	545.2247
	빈곤(PL100-120)	878.5481	1134.389	1372.48
	비빈곤	3170.213	3565.683	4048.778
전체		949.0393	1010.576	1198.011

소득원별 빈곤정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표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절대빈곤 정도가 5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적이전과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한 전후의 빈곤율 변화를 보면, 공적이전 소득이 사적이전 소득보다 빈곤완화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의 심도, 즉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 소득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비율로 나타낸 빈곤갭 비율은 일차소득에 비해 시장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격하게 감소한다. 빈곤의 규모, 빈곤의 심도, 빈곤층 간의 소득불평등까지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Sen 지수는 빈곤층 간에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면, 지수값이 커져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과를 볼 때,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일차소득,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선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소득원별 빈곤정도

구 분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절대적 빈곤(PL100%)	71.0	66.0(-5.0)	56.9(-9.1)
	차상위계층(PL120%)	75.8	71.2(-4.6)	63.8(-7.4)
균등소득	빈곤갭	27.3	12.7	6.8
	Sen지수(*100)	32.7	16.9	9.3

\* 가구가중치 적용.

\* 빈곤갭 :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가진 소득의 차이의 합인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눈값.

\* Sen 지수 :  $P=H*(I+(1-I)*G)$  (H: 빈곤율, I: 빈곤갭 혹은 소득갭, G: 저소득층 사이의 Gini 계수). 0에 가까울수록 빈곤의 정도가 낮음.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소득원별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을 하였다(<표

4참조>). 분석결과, 취업노인이 비취업노인에 비해서 절대빈곤율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경우 모두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원별 빈곤완화 효과를 보면, 사적이전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노인이 비취업 노인에 비해 빈곤완화 효과가 다소 높았지만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시켰을 경우, 비취업노인에게서 빈곤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 소득원별 절대빈곤층 규모

구 분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취업	PL 100	73.3	68.2(-5.1)	59.6(-8.6)
	PL120	77.9	73.1(-4.8)	65.1(-8.0)
비취업	PL 100	68.8	63.9(-4.9)	54.3(-9.6)
	PL 120	73.9	69.4(-4.5)	61.2(-8.2)

\* 가구가중치 적용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사적이전에 비해 노인가구의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의 포함 전후에 빈곤율이 더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공적이전에 포함되는 주된 소득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각 급여의 수급 정도에서 취업여부와 빈곤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취업노인과 비취업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경로연금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비취업 노인이 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다. 공적연금의 경우, 취업노인과 비취업 노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빈곤지위에 따른 급여 수급의 비중을 보면, 교통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소득계층 간 수급 비율이 차이가 난다. 정책적 의도대로, 빈곤노인은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 경로연금에서 수급 비중이 높다.

&lt;표 5&gt; 각종 공적급여 수급 비중

구 분		비율(%)	카이제곱
기초노령연금*	취업노인	61.7	1.726
	비취업노인	55.8	
	빈곤	65.7	16.610***
	비빈곤	46.4	
공적연금	취업노인	22.7	.359
	비취업노인	25.0	
	빈곤	23.8	10.586
	비빈곤	24.6	
기초보장	취업노인	2.1	11.962***
	비취업노인	9.4	
	빈곤	8.3	8.419***
	비빈곤	1.7	
경로연금	취업노인	5.1	12.029***
	비취업노인	14.3	
	빈곤	14.9	6.724**
	비빈곤	8.1	
교통수당	취업노인	85.4	.626
	비취업노인	82.7	
	빈곤	84.4	.002
	비빈곤	84.3	

\*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조사시점.

\*p<.05, \*\*p<.01 \*\*\*p<.001

그렇다면 급여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우리나라 노인들이 수급하는 공적이전 급여 중에서 노인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로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지만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취업노인과 비취업 노인의 급여액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공적연금 수급액은 비취업노인이 취업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취업노인은 월평균 26만원, 비취업노인의 경우 월평균 4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6&gt; 취업여부에 따른 공적급여 수급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공적연금소득	취업	45	26.58	34.32	-1.589
	비취업	55	43.05	62.28	
국민기초생활수급	취업	1	35.00	.	-
	비취업	9	27.11	8.852	
기초노령연금*	취업	92	7.464	1.1491	.436
	비취업	114	7.385	1.4091	
경로연금	취업	7	5.08	.94330	-.455
	비취업	21	5.50	.42457	
교통수당	취업	159	1.21	.7258	.032
	비취업	167	1.21	.06699	

\*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조사시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소득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종 공공부조 제도에 의한 소득 지원이 노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곤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 대상범위가 매우 낮아, 그 보호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그나마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미미한 정도로 소득보장 역할을 있을 뿐이다.

##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복지요인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의 취업결정에 복지요인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살펴 보았다. 독립변수는 개인의 복지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인 빈곤지위 변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유지하는 소득원 중에서 사적이전 소득을 포함하는 시장소득과 공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공적이전 소득액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인과관계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기존 실증연구에서 밝힌 개인요인, 가구요인, 지역요인을 통제하였다.

&lt;표 7&gt; 취업결정 분석모형 : 변수정의 및 측정

변수		변수값		
종속변수	취업여부	취업=1, 비취업=0		
독립변수	복지요인	공적급여수급액	공적이전소득액(연간,만원)	
		시장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 및 부동산, 사적이전소득(월, 만원)	
		빈곤여부	더미변수(비빈곤=0, 빈곤=1) * 2007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빈곤	
통제변수	개인요인	성	더미변수(여성=0, 남성=1)	
		연령	연령(세)	
		교육	미취학=0~대학원 박사=9	
		배우자유무	더미변수(없음=0, 있음=1)	
		의료비지출	지출액(만원)	
	가구요인	가구 형태	노인독거	더미변수(기타가구 기준)
			노인부부	더미변수(기타가구 기준)
			자녀동거	더미변수(기타가구 기준)
		동거미혼자녀수	자녀수	
	지역요인	거주지역	동부(읍면부 기준)	
지역실업률		2008년 지역실업률 평균		

독립변수인 복지요인만을 투입한 Model 1은 노인의 취업결정에 공적급여수급액이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일 뿐, 다른 2개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들이 받고 있는 공적이전 급여 수준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Model 2는 개인요인과 가구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분석결과, 연령과 가구형태 중 노인독거 변수만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고, 기타가구와 비교해서 '노인독거' 가구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연령 1세 증가는 취업가능성이 3.4%(odd ratio 0.966) 감소하고, 기타가구 형태에 비해서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 172%(odd ratio 2.715) 취업 가능성이 증가한다. 거주지역, 지역실업률로 구성된 지역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Model 3의 분석결과, 두 지역변수가 노인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에 비해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187% 취업 가능성 증가). 따라서, 도시지역 노인은 농촌지역 노인보다 취업 환경이 더욱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실업률이 높을수록 노인의 취업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수준은 노동시장의 수요의 영향력이 크다. 이 결과는 노인의 취업은 노동시장 공급측면 접근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를 개선하는 접근 방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전체 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4에서는 각 특성별 변수를 투입한 모델과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복지요인만 고려하였던 Model 1에서 빈곤지위는 노인의 취업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개인요인, 가구요인, 지역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상태는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빈곤 상태에 비해서 빈곤상태로 되면, 노인의 취업가능성은 72%(odd ratio 1.723) 정도 높아진다. 이 결과를 볼 때, 노인의 빈곤상태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서 노인의 빈곤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 Model 4를 통해서 확인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노인의 가구형태가 특성별 변수를 투입할 경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구요인만을 고려한 Model 2와 달리, 모든 특성별 요인을 고려한 경우, 기타가구형태에 비해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형태는 취업에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형태 중에서도 노인독거 가구는 가구요인만을 고려한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다른 가구 형태들 보다 영향력이 더욱 크다.

&lt;표 8&gt; 노인의 취업결정요인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Exp(B)	B	Exp(B)	B	Exp(B)
복지 요 인	공적 급여수급액	.000#	1.000					.001#	1.001
	시장소득	.000	1.000					.001	1.001
	빈곤여부	.410	1.508					.544#	1.723
개 인 요 인	성			.387	1.473			.276	1.318
	연령			-.034#	.966			-.057*	.945
	교육			-.075	.928			.048	1.050
	배우자유무			.018	1.019			.125	1.134
	의료비지출			.000	1.000			.000	1.000
가 구 요 인	가 구 형 태								
	노인독거			.999#	2.715			1.581*	4.861
	노인부부			.730	2.075			1.336*	3.803
	자녀동거			.863	2.370			1.264#	3.538
	동거 미혼자녀수			-.229	.795			.064	1.066
지 역 요 인	거주지역					1.055***	2.873	1.142***	3.134
	지역실업률					-.348**	.706	-.482**	.618
Constant		-.484#	.616	.596#	1.815	.543	1.720	1.075	2.930
N		471		434		494		412	
-2 Log likelihood		646.936		585.059		634.699		496.368	
Nagelkerke R Square		.015		.047		.127		.218	

#p&lt;.10, \*p&lt;.05, \*\*p&lt;.01, \*\*\*p&lt;.001

#### IV.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 결정요인 및 인지 노인의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

: 현재 미취업 상태이면서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응답노인(15,146명) 중에서 34.5%(5,224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65.5%(9,921명)는 실업노인이거나 비경제활동노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미취업노인 중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는 노인은 41.5%(4,117명)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64.8%)에 비해 도입시점이 상대적으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미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관심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미취업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미취업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노인들이 향후 일할 의사를 갖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서비스의 인지여부 결정요인 모형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적용시켜 보고, 인지노인 대상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을 이항 로짓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 결정요인 분석

###### 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일반적 특성 비교

미취업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보았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즉 노인일자리의 욕구집단이 될 수 있는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미인지: 1,786명, 전체 표본의 11.8% / 인지: 1,894명, 전체 표본의 12.5%) 교차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표 9>)는 다음과 같다.

〈표 9〉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요부에 따른 집단 간 일반적 특성

구 분	사업 미인지		사업 인지		카이제곱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726	40.6	1,010	53.3	59.276***
	여성	1,060	59.4	884	46.7	
연령	60-64세	547	30.6	697	36.8	60.801***
	65-69세	522	29.2	598	31.6	
	70-74세	379	21.2	403	21.3	
	75-79세	216	12.1	135	7.1	
	80-84세	85	4.8	43	2.3	
	85세 이상	37	2.1	17	.9	
거주지역	동부	1,522	85.2	1,689	89.2	13.277***
	읍면부	264	14.8	204	10.8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175	9.8	64	3.4	131.289***
	무학(글자해독)	211	11.8	152	8.0	
	초등학교	662	37.1	618	32.6	
	중고등학교	576	32.3	744	39.3	
	전문대이상	161	9.0	316	16.7	
가구형태	노인독거	277	15.5	254	13.4	11.996
	노인부부	797	44.6	879	46.4	
	자녀동거	627	35.1	628	33.2	
	기타가구	86	4.8	133	7.0	
기능상태	제한없음	1,418	79.4	1,695	89.5	72.657***
	제한있음	368	20.6	198	10.5	
계		1,786	100.0	1,894	100.0	

\*\*\*p&lt;.001

성별로는 사업 미인지 집단은 여성노인이 18.8%p 많은 반면, 사업 인지 집단은 남성노인이 6.6%p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대다수가 여성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연령계층의 경우 전기고령자(~75세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 미인지 집단은 81.0%, 사업 인지 집단은 89.7%로 나타남에 따라, 고연령 집단이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 노인이 읍면지역 노인에 비해 사업 미인지 집단의 경우 70.4%p, 사업인지 집단의 경우 78.4%p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미인지 집단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사업 미인지 집단

의 경우 노인독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사업 인지 집단은 노인부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수치상의 큰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사업미인지 집단은 58.7%, 사업 인지 집단은 44.0%로 14.7%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사업 미인지 집단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는 일에 대한 의사는 동일하지만 신체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이 사업 미인지 집단에서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t검증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과 인지하고 있는 집단 간의 경제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10>), 사업 미인지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업 인지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심리적 특성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소득은 사업 미인지 집단은 133.9만원, 사업 인지 집단은 154.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지출은 각각 104.7만원과 120.1만원으로, 사업 미인지 집단이 인지 집단에 비하여 소득과 지출이 낮은 상태이며 가계수지 역시 낮은 상태이다. 또한 사업 미인지 집단은 심리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질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동일한 일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집단이며,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 활동 종사를 통하여 가구 소득보전 및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라 하겠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제공함을 통해 1차적으로 소득보전의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특히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커야 하며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고 하였으나(Calsyn & Winter, 1999),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0〉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경제적 특성	가구월소득(만원)	사업 미인지	9,858	133.9	163.63	-7.960***
		사업 인지	10,435	154.7	205.18	
	가구월지출(만원)	사업 미인지	9,847	104.7	88.67	-11.380***
		사업 인지	10,420	120.1	102.78	
	월가계수지(만원)	사업 미인지	9,847	29.3	132.05	-2.490*
		사업 인지	10,420	34.8	177.46	
가구순자산(백만원)	사업 미인지	9,510	140.6	207.74	-9.999***	
	사업 인지	10,176	177.0	293.33		
심리적 특성	우울(점)	사업 미인지	1,651	5.42	4.479	7.244***
		사업 인지	1,724	4.34	4.234	
	삶의 질(5점척도)	사업 미인지	858	3.01	0.567	-5.916***
		사업 인지	1,054	3.16	0.493	

\* 경제적 특성은 가구가중치 적용

\*\*\*p<.001, \*p<.05

노인일자리사업 미인지 집단과 인지 집단 간의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 유무 및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등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사업 미인지 집단은 인지집단에 비하여 단체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평생교육 6.4%p, 자원봉사활동 12.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미인지 집단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겠다. 사회활동 참여는 활동을 통한 본래의 목표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망 혹은 연결망 확보를 통하여 정보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사업 미인지 집단은 인구학적,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취약 집단이면서 사회활동에 적게 노출되어 있어 근로의 욕구는 있으나 실제 근로활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사회적 기회가 차단된 폐쇄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실태

구 분		사업 미인지		사업 인지		카이제곱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친목단체 참여	유	1,013	56.7	1,243	65.7	30.955***
	무	773	43.3	650	34.3	
종교단체 참여	유	884	49.2	993	52.4	3.163*
	무	902	50.5	901	47.6	
문화활동단체 참여	유	21	1.3	63	3.3	15.671***
	무	1,762	98.7	1,830	96.7	
스포츠레저단체 참여	유	59	3.3	150	7.9	36.615***
	무	1,727	96.7	1,743	92.1	
시민사회단체 참여	유	12	.7	41	2.2	14.446***
	무	1,774	99.3	1,852	97.8	
이익정치단체 참여	유	6	.3	24	1.3	9.867**
	무	1,780	99.7	1,869	98.7	
봉사단체 참여	유	55	3.7	145	7.7	37.503***
	무	1,731	96.9	1,748	92.3	
학습단체 참여	유	83	4.6	156	8.2	19.538***
	무	1,703	95.4	1,737	91.8	
평생교육 참여	유	218	12.2	353	18.6	29.083***
	무	1,568	87.8	1,540	81.4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	209	11.7	455	24.0	94.365***
	무	1,577	88.3	1,439	76.0	
계		1,786	100.0	1,893	100.0	

\*\*\*p<.001, \*\*p<.01, \*p<.05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정부가 최근 노인일자리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인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수준을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집단과 미인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사업 미인지 집단은 각 서비스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기초노령연금 5.7%p, 장기요양보험 32.7%p, 노인돌보미 바우처 24.3%p만큼 높게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미인지 집단의 경우 인지 집단에 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시책 정보에 소외된 비율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노인관련 정책 인지수준

구 분		사업 미인지		사업 인지		카이제곱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기초노령연금	인지 유	1,600	89.6	1,805	95.3	43.425***
	인지 무	186	10.4	89	4.7	
장기요양보험	인지 유	354	19.8	995	52.5	423.652***
	인지 무	1,432	80.2	899	47.5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 유	331	18.5	811	42.8	252.997***
	인지 무	1,454	81.5	1,083	57.2	
계		1,786	100.0	1,893	100.0	

\*\*\*p&lt;.00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는 사업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하고 있던 경로당, 복지관 등의 기관(32.6%),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26.8%),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14.1%),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13.3%), 등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각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문국 외, 2007). 실제 노인일자리사업 미인지 집단과 인지 집단의 노인복지서비스 주요 인지 경로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표 13>), 상대적으로 사업인지 집단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각종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미인지 집단은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주요 인지경로

구 분 <sup>4)</sup>		사업 미인지		사업 인지		카이제곱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대중매체		938	28.9	1,519	39.5	704.089***
동사무소 및 복지기관		655	20.1	73	19.1	
가족 및 친인척		507	15.6	495	12.9	
이웃 및 친구		705	21.7	869	22.6	
홍보물		194	6.0	214	5.6	
들어본 적 없음		158	4.9	0	.0	
기타		92	2.8	10	.3	
계		3,249	100.0	3,842	100.0	

\*\*\*p&lt;.001

## 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결정요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앞서 설명한 Anderson & Newman(1973)의 behavioral model을 적용하여 소인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 요인 및 기타 요인으로 나누어 이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는 Anderson & Newman(1973) 및 기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변수들을 토대로 하여 각 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되, 다음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1)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여부 및 과거 취업여부는 사회적 관계망 확보 차원으로,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 기관으로서 노인의 사업 인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요인에 포함하였다. 2)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보전 기능이 강하므로 경제적 특성(가구소득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을 선행연구들과 같이 가능성 요인에 포함하지 않고 욕구 요인에 포함하였다. 3) 평생교육 희망 및 자원봉사 희망은 사회활동 욕구의 하나로 사회활동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욕구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욕구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지여부는 세 요인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국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기타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분석은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 3,6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아래 <표 14>와 같다.

---

4) 다중응답으로 구성된 문항이기 때문에 전체 케이스 수에 차이가 있음

&lt;표 14&gt; 인지 결정 분석모형 : 변수정의 및 측정

변수		변수값
인지여부		0=미인지, 1=인지
소인요인	성	더미변수(0=여성, 1=남성)
	연령	연령(세)
	교육수준	1=무학(글자모름), 2=무학(글자해독), 3=초등졸, 4=중·고등학교졸, 5=전문대졸 업이상
가능성요인	지역	0=읍면부, 1=동부
	사회활동참여수	참여활동 개수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까운 친구·이웃 수	친구·이웃 수
	노인(종합)복지관 참여여부	0=미참여, 1=참여
	과거 취업여부	0=무, 1=유
욕구요인	가구소득	소득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0=미수급, 1=수급
	기능상태	0=제한 유, 1=제한 무
	삶의 질	삶의질 점수(1~5점 척도)
	평생교육 희망	0=미희망, 1=희망
	자원봉사 희망	0=미희망, 1=희망
기타요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0=미인지, 1=인지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여부	0=미인지, 1=인지

분석 결과(<표 15>) 소인 요인 중에서는 성, 연령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남성 노인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여성노인일수록 서비스 인지도가 높거나 성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정책’으로서 근로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보다 높은 남성에게 사업 정보가 더 인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3단계까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다가 4단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 변수의 투입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요인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참여여부와 과거 취업여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인(종합)복

기관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인지확률을 증가시켰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역단위 기관이면서 노인일자리 정보를 얻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대부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근로의 의사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취업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확보, 취업경험이 주는 근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 현실성, 정보획득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과거 취업여부는 4단계까지 높은 큰 의미를 가지는 변수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인지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본 연구에서 지역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에도 지역내 통반장·이장 및 이웃, 경로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 요인보다는 영향력이 있었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사업 인지여부가 더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 결정요인 분석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 <sup>5)</sup>	.316***	1.371	.291**	1.338	.310**	1.364	.298**	1.347
연령	-.033***	.968	-.035***	.966	-.026***	.974	-.023**	.977
교육수준	.289***	1.336	.240***	1.271	.170***	1.186	.075	1.078
거주지역			.231*	1.259	.164	1.178	.035	1.036
사회활동참여수			.146***	1.157	.035	1.036	-.013	.987
가구원수			-.027	.973	-.024	.976	-.019	.981
가까운친구·이웃수			.010	1.010	.008	1.008	.004	1.004
노인(종합)복지관 참여여부			.368***	1.444	.271**	1.311	.228*	1.256
과거취업여부			.378***	1.459	.364**	1.440	.399***	1.491
가구소득					.000	1.000	.000	1.000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006	1.006	.012	1.012
기능상태					.474***	1.607	.409***	1.506
삶의 질					-.006	.994	-.026	.975
평생교육희망					.433***	1.541	.396***	1.486
자원봉사 희망					.399***	1.491	.274*	1.31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1.068***	2.909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여부							.782***	2.186
Constant	1.288**	3.625	.868	2.383	.115	1.122	.018**	1.018
N	3,156		3,156		3,156		3,156	
-2 Log likelihood	4212.412		4153.971		4079.908		3784.250	
Nagelkerke R Square	.063		.087		.116		.225	

\*\*\*p&lt;.001, \*\*p&lt;.01, \*p&lt;.05

욕구요인 중에서는 특히 기능상태,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희망여부가 노인 일자리사업 인지 확률에 영향을 미쳤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을수록, 즉 건

5) 더미변수 처리 : 성(여성=0), 지역(읍면부=0), 노인복지관 참여여부(미참여=0), 과거취업 여부(미취업=0),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미수급=0), 기능상태(제한있음=0), 평생교육희망(미희망=0), 자원봉사희망(미희망=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미인지=0),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여부(미인지=0)

강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았으며,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았다. 동일한 근로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상태가 더 열악한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타 요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를 인지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이 노인복지서비스들에 대해 인지해야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한다기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은 대체로 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수준도 낮아 전반적인 복지인식 수준이 취약하므로, 이러한 집단을 발굴하여 정보를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은 일할 의사가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표적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투입 변수 중 특히 영향력이 높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인지여부, 기능상태, 과거 취업여부 평생교육 희망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 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노인의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 분석

분석자료에서,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노인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은 5.4%(2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경험이 없는 노인(3,893명)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44.5%(1,732명, 전체 표본의 11.4%)나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이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중(5,768명)에서 앞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도 30.9%(1,786명, 전체 표본의 11.8%)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의 비교집단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나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향후 일할 의사도 없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5% 비중에 해당된다.

<p><b>관심집단</b> : 미취업노인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1,732명, 전체노인의 11.4%)</p> <p><b>비교집단</b> : 미취업노인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향후 일할 의사가 없는 노인(2,161명, 전체노인의 15%)</p>
---

## 1) 경제활동 선호여부에 따른 집단 간 일반적 특성 비교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일반적 특성 비교

구 분		향후 일할 의사 있음		향후 일할 의사 없음		카이제곱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927	53.5	779	36.0	118.9***
	여성	806	46.5	1,382	64.0	
연령계층별	60~64세	668	38.6	505	23.4	269.2***
	65~69세	545	31.5	560	25.9	
	70~74세	357	20.6	478	22.1	
	75~79세	111	6.4	349	16.1	
	80~84세	39	2.3	189	8.7	
	85세 이상	12	0.7	81	3.7	
거주지역별	동부	1,552	89.6	1,773	82.0	44.1***
	읍면부	180	10.4	388	18.0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209	12.1	330	15.3	25.4***
	노인부부	812	46.9	1,033	47.8	
	자녀동거	584	33.7	710	32.8	
	기타가구	127	7.3	89	4.1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56	3.2	176	8.1	122.5***
	무학(글자해독)	128	7.4	283	13.1	
	초등졸	544	31.4	778	36.0	
	중/고등졸	702	40.5	679	31.4	
	전문대졸이상	302	17.4	245	11.3	
기능상태별	제한없음	1,559	90.0	1,606	74.3	154.6***
	제한있음	174	10.0	555	25.7	
계		1,733	44.5	2,161	55.5	

\*\*\*p&lt;.001

우선, 성별로는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7%p 많은 반면,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28%p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 기존 성역할에 대한 고전적인 가치관<sup>6)</sup>으로 인해 과거 취업경험이 남성노인(96.5%)에 비해 여성노인(62.8%)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령계층의 경우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의 경우 전기고령자(~75세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7%인 반면, 일할 의사가 없는 집단일 경우 71.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저연령 노인일수록 경제활동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고령자 내에서도 60대와 70대의 구성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집단 간 두드러진 구성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중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에 57.9%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집단(42.7%)에 비해 15.2%p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욕구를 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건강이 양호한 사람이 보다 높은 경제활동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개인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집단간 평균 검증(t-test)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태	가구연간소득(만원)	일할 의사 있음	1,732	2,206	3,214	-1.354
		일할 의사 없음	2,161	2,086	2,322	
	가구순자산(백만원)	일할 의사 있음	1,671	253	393	-0.863
		일할 의사 없음	2,053	242	400	
	개인월소득(만원)	일할 의사 있음	1,731	78	106	-5.585***
		일할 의사 없음	2,159	60	96	
	개인순자산(백만원)	일할 의사 있음	1,704	129	238	-3.949***
		일할 의사 없음	2,124	98	237	

\*\*\*p<.001

한편, 객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집단간 비교 결과(<표 17>) 가구단위의 소득 및

6)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자산은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사이에서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개인단위에 있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향후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조사들에서 보고되는 보편적인 결과(경제활동 욕구의 형성배경 중 가장 큰 비중은 생계비 마련임) 등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일 수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첫째, 두 집단간 기본적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기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성이면서 전기고령자이며 교육수준도 높고 건강측면의 기능상태도 양호한 노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생활의 영위가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개인의 경제상태 만으로 그 가구의 경제상태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첫째 지적한 집단간 일반적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위의 소득 및 자산 수준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노인의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

노인일자리사업 인지노인 대상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이며,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독립변수 중 더미 코딩한 변수는 아래와 같다.

종속변수: **향후 일할 의지**(0=없음, 1=있음)

독립변수: **인구지리학적 변수**(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현재 경제상태 변수**(가구소득, 노인개인자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현재 건강상태 변수**(기능상태 제한여부)

**과거행태 변수**(과거 취업경험 유무)

**미래 사회참여욕구 변수**(평생교육 참여의향 여부, 자원봉사 참여의향 여부)

더미변수: 성, 거주지역, 취업경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기능상태 제한여부, 평생교육 참여의향 여부, 자원봉사 참여의향 여부

현재 미취업노인이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경제활동참여 선호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인구 지리학 변수	성	.700***	2.014	.661***	1.937	.428***	1.534	.602***	1.826
	연령	-.420***	.657	-.454***	.635	-.414***	.661	-.402***	.669
	교육수준	.104***	1.110	.124***	1.132	.125***	1.133	.022	1.022
	거주지역	.386***	1.470	.412***	1.510	.389***	1.475	.381***	1.464
경제상태 변수	LOG_가구소득			-.112	.894	-.088	.916	-.133*	.875
	LOG_개인총자산			.066	1.068*	.032	1.032	.029	1.030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241	.786***	-.242***	.785	-.292***	.747
건강상태 및 과거행태	기능상태 제한여부					.771***	2.162	.648***	1.912
	과거 취업경험					-.698***	.498	-.661***	.516
사회참여 욕구변수	평생교육 참여의향							-.533***	.587
	자원봉사 참여의향							-.593***	.553
constant		-.237	.789	.101	1.106	-.384*	.681	.893***	2.442
N		3,746		3,746		3,746		3,746	
-2 Log likelihood		4921.6		4909.5		4791.7		4675.1	
Nagelkerke R Square		0.139		0.143		0.179		0.213	

\*p<.10, \*\*p<.05%, \*\*\*p<.01

7) 더미 코딩 내용

Categorical Variables Codings			
		사례수(명)	Parameter coding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	아니오	3,057	1
	예	689	0
거주지역	동부	3,011	1
	읍면부	735	0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아니오	2,392	1
	예	1,354	0
과거 취업경험여부	없다	755	1
	있다	2,991	0
향후 평생교육 참여희망	아니오	2,470	1
	예	1,276	0
성별	남성	1,598	1
	여성	2,148	0
기능상태 제한	없다	2,989	1
	있다	757	0

우선 인구지리학적 독립변수들을 보면 교육수준을 제외하면 성, 연령,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확률이 높게(Exp(B): 1.826)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고령자가 후기고령자에 비해, 동부지역 거주노인이 읍면지역 거주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주석의 교차분석 결과<sup>8)</sup>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참여욕구 변수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상태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 포함된 노인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의 총자산 변수는 선호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수준(10%)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비해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비록 경제생활의 영위가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인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100%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의 총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총자산 구성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에 집중화 된 경향<sup>9)</sup>을 나타냄으로써 유동성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취

#### 8) 교차분석 결과

		교육수준					Total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졸	중/고등졸	전문대 졸업 이상	
평생교육 참여희망 여부	아니오	191 82.3%	317 77.1%	877 66.4%	773 55.9%	271 49.5%	2429 62.4%
	예	41 17.7%	94 22.9%	444 33.6%	609 44.1%	277 50.5%	1465 37.6%
Total		232 6.0%	411 10.6%	1321 33.9%	1382 35.5%	548 14.1%	38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					Total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졸	중/고등졸	전문대 졸업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 여부	아니오	222 96.1%	392 95.4%	1133 85.8%	994 72.0%	346 63.1%	3087 79.3%
	예	9 3.9%	19 4.6%	188 14.2%	387 28.0%	202 36.9%	805 20.7%
Total		231 5.9%	411 10.6%	1321 33.9%	1381 35.5%	548 14.1%	38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총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77.7%)이 금융자산(22.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업 경험 유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도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욕구 변수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흥미롭다.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에서의 참여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상호변수의 관계는 인과성 보다는 상관성 측면이 강할 것이다. 어쨌든, 이는 유급노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각종 사회참여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 대상자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노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V. '일'에 대한 '노인'의 욕구 파악

본 장에서는 앞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미취업 노인의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을 살펴 본 것에 이어서 이들이 희망하는 경제활동 조건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향후 일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욕구가 생성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표 19>) '생계비 마련(47.9%)'과 '용돈 필요(21.5%)'가 69.4%를 차지하고 있어, 10명중 7명 가량은 경제적 자율성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 건강유지(15.4%)나 시간 보내기(9.9%) 등 까지 감안하면 노인에게 있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노인 4고(苦)'를 직간접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시켜주는 도구로서 기대되어지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표 19> 일반적 특성별 현재 직업 없는 응답자의 향후 일하고 싶은 이유  
(단위: %)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 필요	건강 유지	사람들과 교제	시간 보내기	기타	계	사례수 (명)	
전체	47.9	21.5	15.4	3.7	9.9	1.6	100.0	3,680	
성별	남성	49.5	20.3	14.7	3.6	10.7	1.3	100.0	1,736
	여성	46.6	22.6	16.0	3.7	9.2	1.9	100.0	1,944
연령	60-64세	53.1	18.7	13.5	2.8	10.9	1.1	100.0	1,245
	65-69세	48.1	22.9	15.7	4.1	8.3	0.9	100.0	1,120
	70-74세	44.0	23.5	16.4	4.3	9.2	2.6	100.0	782
	75-79세	42.8	23.6	15.4	4.5	10.6	3.1	100.0	351
	80-84세	38.0	20.1	20.7	1.1	17.2	2.9	100.0	128
	85세 이상	39.7	19.5	24.1	5.2	9.6	1.9	100.0	53
거주지역	동부	48.2	20.9	15.0	3.8	10.6	1.4	100.0	3,212
	읍면부	46.0	25.3	18.1	2.5	5.2	2.9	100.0	468
교육수준	무학 (글자모름)	50.6	24.4	13.0	1.7	8.8	1.5	100.0	240
	무학 (글자해독)	55.2	22.4	11.9	1.8	6.8	2.0	100.0	363
	초등학교	54.4	21.9	11.4	2.5	8.2	1.5	100.0	1,280
	중·고등학교	45.5	21.6	16.3	3.9	11.4	1.3	100.0	1,320
	전문대이상	30.4	17.9	27.3	8.4	13.3	2.6	100.0	477
가구형태	노인독거	55.3	20.4	13.2	2.6	7.6	0.9	100.0	531
	노인부부	45.6	20.6	17.0	3.6	11.0	2.1	100.0	1,676
	자녀동거	47.6	22.4	13.8	4.3	10.4	1.5	100.0	1,246
	기타	49.3	25.9	16.7	3.1	4.5	0.7	100.0	227
월가구소득	50만원 미만	56.7	20.9	11.0	2.6	6.9	1.8	100.0	878
	50-99만원	51.7	22.9	13.3	2.7	7.8	1.5	100.0	863
	100-199만원	47.1	20.9	16.5	2.7	11.3	1.5	100.0	935
	200-299만원	40.1	19.9	19.8	4.6	13.5	2.2	100.0	445
	300만원이상	35.8	22.6	20.0	7.7	12.6	1.3	100.0	56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2	21.8	16.0	3.8	9.7	1.5	100.0	3,113
	제한 있음	52.1	19.6	11.8	3.0	11.0	2.5	100.0	567

주: 1)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3,680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는 경우 성별에 따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계층의 경우 전기고령자일수록 생계비 마련에의 욕구가 큰 반면 후기고령자는 상대적으로 건강유지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높은 학력을 가진 노인일수록 건강유지나 시간활용에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노인독신가구일 경우가 생계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생계비 마련에 대한 비중은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양호할수록 건강유지 및 시간활용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시간 보내기에 응답한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읍면부 거주노인에 비해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상태 측면에서는 이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에서 건강유지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증진 개념보다는 건강유지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기능상태의 제한이 경제적 취약성과 연결된 결과로도 볼 수 있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쨌든,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및 궁극적 정책대상자들<sup>10)</sup>에 대한 욕구수준(근무일수, 근무시간, 직업분야, 급여수준 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지금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 지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1. '노인'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간극

### : 노인일자리사업 미참여 사유를 중심으로

현재 미취업노인 중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 1,732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 과 같다.

10) 노인일자리사업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현재는 미취업자이지만 향후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

〈표 20〉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불참 사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에 불참했던 이유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415	24.0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13	23.8
	몸이 불편해서	343	19.8
	참여방법을 몰라서	259	15.0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62	9.4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65	3.8
	시간이 없어서	33	1.9
	보수가 너무 적어서	19	1.1
	기타	12	0.7
	거리가 너무 멀어서	11	0.6
계	1,732	100.0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3.8%, ‘몸이 불편해서’ 19.8%, ‘참여방법을 몰라서’ 15.0%,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9.4%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했으나 선발과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정부추진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전에 정해진 일자리 배정량에 맞춰 사업유형별로 선발기준표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발기준표의 대표적인 고려요소로서는 참여신청 노인의 연령, 재산상황, 전문성, 가구형태, 자원봉사 참여여부 등이 있다. 사실 전문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확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과거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현재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해 경제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거나, 가족구성원의 변화(배우자의 사망 등)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 확대 욕구가 새롭게 생겼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변 노인에 의한 영향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치관 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참여방법을 몰랐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4.4%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의 고민이 확대되어야 할 지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참여방법을 몰랐다는 말은 정책의 추진 주체가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참여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한 노인의 96.1%가 동부 거주노인임을 감

안하면 도시지역에서의 체계적인 홍보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이면에는 제한된 일자리 배정량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한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내용의 다양성 부분에서 노인의 욕구와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1〉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애 주된 일자리 직업분포

구 분	전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관리자	44	3.2	9	6.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	7.7	14	9.9
사무종사자	68	5.0	11	7.8
서비스종사자	74	5.4	5	3.5
판매종사자	33	2.4	3	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	2.0	1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0	2.9	2	1.4
장치,기계 조작조립종사자	40	2.9	12	8.5
단순노무종사자	936	68.4	84	59.6
계	1,732	100.0	141 <sup>1)</sup>	100.0

주 1) 결측치 21명 제외

<표 21>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들(141명)의 생애 주된 일자리 직업분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종사자 등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공되는 일의 전문성 측면에서의 괴리가 특히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노인이 원하는 일의 형태

### 1) 희망 근무형태 및 급여수준

현재 미취업노인 중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 1,732명을 대상으로 일과 관련된 노인의 욕구수준 중에서 희망하는 근무형태 및 급여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욕구수준(희망근무일수, 희망근무시간, 희망급여)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희망급여 (만원)
주5일 일하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는 형태	1,045	28.4	70.0
주5일 일하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형태	716	19.4	89.7
주중 2-3일 일하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는 형태	1,238	33.6	44.6
주중 2-3일 일하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형태	197	5.4	61.9
토요일, 일요일에만 일하는 형태	66	1.8	55.1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형태	415	11.3	77.5
모름/무응답	3	0.1	72.6
계	3,680	100.0	65.4

우선,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주중 2~3일 일하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는 형태'가 33.6%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집단이 희망하는 급여는 평균 44.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추진방향과 비교해 볼 때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급여수준 측면에서는 20만원에 불과해 24.6만원의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5일 일하면서 전일근로나 시간제근로를 선호하는 비율도 47.8%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급여수준도 70.0~89.7만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추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의 내실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희망 종사직업 분야 및 구직 시 우선조건

현재 미취업노인 중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 향후 희망하는 종사직업 분야를 살펴보면 단순노무를 희망하는 노인이 전체의 75.8%나 차지하고 있어 전문 분야(5.7%) 및 서비스 분야(4.8%)에 대한 선호도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애 주된 직업분야와 향후 원하는 직업분야를 살펴보면(<표 23>) 단순노무종사자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및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적정선의 타협

을 추구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노인과 농림어업 종사노인 중에서 87%는 단순노무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과거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기능종사자 등에서도 단순노무를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각각 74%, 71%, 65%), 심지어 과거 전문가 집단에서도 33% 가량이나 단순노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이 생애 주된 직업분야별 향후 희망하는 종사직업 분야

구 분	취업경험없음	생애 주된 직업분야										사 례 수 (명)	비 율 (%)	
		관 리 자	전 문 가 및 관 련 사	사 무 종 사 자	서 비 스 종 사 자	판 매 종 사 자	농 림 어 업 숙 련 종 사 자	기 능 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장 치, 기 계 조 작 조 립 종 사 자	단 순 노 무 종 사 자	군 인			
향 후 원 하 는 직 업 분 야	관리자	0	48	9	0	1	5	0	2	0	2	0	67	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	21	86	25	12	5	2	8	5	8	2	183	5.7
	사무 종사자	8	18	21	40	4	1	5	1	0	4	0	102	3.2
	서비스 종사자	32	10	8	12	29	15	10	17	0	20	0	153	4.8
	판매종사 자	4	0	3	1	3	32	0	6	0	7	0	56	1.7
	농림어업 숙련종사 자	3	2	7	0	3	0	20	0	1	4	0	40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	3	0	2	0	3	1	63	4	6	0	92	2.9
	장치, 기 계 조작조립 종사자	4	11	0	3	2	7	3	12	39	3	0	84	2.6
	단순노무 종사자	440	148	65	111	130	189	276	201	94	762	15	2431	75.8
계	510	261	199	194	184	257	317	310	143	816	17	3208	100.0%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향후 구직 시 우선조건 조사결과(<표 24>)를 통해 가능하다. 즉,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가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접근의 편의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는 있으나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22.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13.4%),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13.4%) 등 노인 개인의 역량 및 노인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의 기대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

결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응답비율 합계가 49.1%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4〉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향후 구직 시 우선적 고려사항

향후 구직 시 우선조건	사례수(명)	비율(%)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763	20.7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에 맞아야 한다	297	8.1
근무일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근무조건과 맞아야 한다	398	10.8
과거 내가 주로 했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71	7.4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969	26.3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21	3.3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618	16.8
사회적 체면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10	.3
직장 내에 또래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58	1.6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34	.9
내가 하는 일이 지역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05	2.9
기타	36	1.0
계	3,680	100.0

##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노인 집단의 경우 노인 가구의 빈곤해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영향력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보다 더 높다. 한편, 취업노인과 비취업 노인 간에는 각종 공적 급여의 수급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급여수준에서는 집단간 격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빈곤, 비빈곤 노인 간에도 공적급여 수준의 실제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노인 집단의 취업결정 요인 분석 결과 저연령 노인일수록, 독거노인가구일수록, 동부지역 거주노인일수록, 지역실업률이 낮을수록 실제로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복지상태, 즉 빈곤상태와 공적이전 급여수준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결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지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

인 취약집단인 여성, 고연령, 저학력,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중 여성 노인은 전체 참여자의 58.1%, 70대 이상의 고연령 역시 전체 참여자의 59.2%를 차지하는 등 참여자의 비율 내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적다. 그러나 실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정보 소외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취약집단이 대거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섯째, 취업경험이 없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경험이 없는 노인일수록, 타 노인복지정책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참여 의사가 없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경제활동 선호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남성노인일수록, 저연령노인일수록, 동부지역 거주노인일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는 노인일수록 향후 경제활동을 선호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경제활동 의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가구소득 평균에 대한 t-test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경제활동 선호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향후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상태(소득, 자산)와 관련해서는 집단간 평균비교 결과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연령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로짓분석에서는 개인의 자산이 경제활동 선호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같이 보다 객관적 변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급노인일수록 경제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인과성보다는 상관성 측면이 강함을 고려하더라도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대상자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홉째, 현재 미취업노인 중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참사유를 살펴본 결과 25%는 신청했지만 탈락하는 등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또 다른 25%는 실제로 참여방법을 모른다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현재 미취업노인 중 앞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들이 원하는 근무형태

는 시간제 근로(62%)가 종일제 근로(2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의 조합 결과 '주중 2~3일 일하되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고 싶다'는 노인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 집단이 희망하는 급여수준은 44.6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 한번째, 향후 원하는 종사직업 분야도 본인의 취약한 인적자본 및 노인 근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선입견 등이 반영되어 단순노무직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구직 시 원하는 조건을 보더라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라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응답비중을 보더라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가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노동공급을 약화시킨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부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노인들은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지만, 이들에게 복지기반이 되고 있는 각종 공적급여 지원수준은 복지의존성을 초래할 만큼 높지 않다. 분석모델에서, 공적이전 급여수준이 노인의 취업결정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은, 소득보장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빈곤한 노인들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산적 복지 기조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경제적 빈곤에 처한 일하는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인지가 곧 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필요한 정책 대상집단에게 사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 기관(전달체계)<sup>11)</sup>의 서비스 내용이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미인지 집단은 노인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노인복지기관으로의 접촉을 최대한 유도하여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소외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번도 취업경험이 없는 노인의 경우 근로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것으로 유추되므로 이러한 노인들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내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준의 사업 홍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사업미인지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인지 경로에

11) 2008년 현재 1개 시군구당 평균 3.8개의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인지 비율이 특히 낮았는데, 성별, 연령, 지역에 상관 없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노인일자리아업 홍보를 통하여 폐쇄적인 표적집단이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지점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일자리아업을 알고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들 중 50%는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모른다거나, 예산제약에 따른 사업량 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준이 본인의 욕구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노인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꾸준한 양적확대를 동반한 질적 내실화,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방향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급노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각종 사회참여 욕구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대상자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노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 바, 정부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연계지점 확보 또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유진·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6(4).
- 구인회·손병돈(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한국노년학. 25(4) : 35-52.
- 권문일(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권승·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성별, 거주자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 김영범(2008).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3), 29-51.
- 김신영(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연구. 노인복지연구, 32, 99-117.
- 김수완 외(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 5-37.
- 김수완(2007).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전략과 한국의 선택-국가·시장·가족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 441-467.
-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김학주(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 97-110.
- 김학주·우경숙(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24(2): 97-110.
- 대한민국정부(200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2010.
-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

- 책연구. 제 3권 제 1호 : 103-140.
-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Vol. 3(1) : 103-140.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노인 복지시설 현황.
- 변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5(2) : 31-64.
- 석상훈(2009). 노인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성지미·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6(1) : 39-74.
- 원석조(2008).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빈약한 증거와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 Vol. 33.
- 유길상(2004).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 12권.
- 윤형호 외(2007). 윤형호·황진수·임석인. 2007. 서울시 고령재취업자의 직종선택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4).
- 이만우, 김진영, 김대철(2008). 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56호.
- 이성용(2007). 중·고령자의 실직·재취업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I), 2007. 12.
- 엄동욱(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8권(3): 17-38.
- 이문국·조준행·이지은·이현미(2008).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철희(2002). 한국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 1995~2000.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 장지연(2002).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부가칭·이혜정·신현규·이철희·장숙량·조성일·Berkman, L. F(2007).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7)
- 최문정(2005). 고령근로자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주된 일자리와 은퇴과정 계층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 Calsyn, R. J. & Winter, J. P.(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ervice use by the elderly : the Strength of the behavioral model and the value of interaction term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3), 284-303.
- Calsyn, R. J. & Winter, J. P.(1999). Predicting specific service awareness dimensions. Research on Aging, 21(6), 762-780.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hrenbeg, R. G and Smith, R.S. 2000. Modern Labor Economics-Theory and Public Policy. Seventh Edition. Addison-Wesley.
- Maestas, N., 2005. "Back to work", Working paper, WR-196-1, RAND Labor & Population.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 Pampel F. C. & Weiss, J. A. 1983. "Economic Development, Pension Policies,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Aged Male: A Cross-national Longitudi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9, No. 2,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Rebick. M. E. 1994. "Social Security and Older Workers' Labor Market Responsivenes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weden". (eds) in Blank. Rebecca. M. *Social Protection versus Economic Flexibility- Is There a Trade Off?*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